영·호남 8개 시·도, 지방분권·균형발전 힘 모은다

●전북 무주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16개 공동 대응 성명서 채택 중앙정부 건의 합의

정부 권한 이양 통한 지방재정 확충 공감대 형성

광주·전남·전북·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등 영·호남 8개 시·도가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8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동서화합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 현황 보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6개 공동대응 성명서 채택, 협력회의 차기 의장 선출 등으로 진행됐다.

8개 시·도는 지방정부가 실질 권한을 갖고 지역의 발전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진정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 협력과제 8개, 지역균형발전과제 8개 등 16개 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또 16개 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합의했다.

공동 협력과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 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 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 대응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 지역 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 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R-비자) 제도 건의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이다.

지역균형발전과제는 동서 교류와 남부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울산-양산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고속도로 건설 ▲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건설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건설 ▲사천 우주항공선 철도 건설 등이다.

8일 전북 무주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이날 '지방재정 위기극복대책 마련 공동대응'을 건의했다. 이에 8개 시·도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우선 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사업이나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세금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정부의 임무지만 세금정책 결정 시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이 함께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지방교부세율 5% 인상 ▲종합부동산세·부동산교부세 폐지 반대 ▲지방재정 확충 없는 세제 개편 반대 ▲국가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 철회 및 국고보조사업 분담률 인하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지방이 소멸위기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독일 연방 주정부 방식에 준하는 권한 확대와 중앙-지방정부 간 조세 수입 배분 등을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가 필요하다"며 "저출생 대응 관련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협의 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에 영·호남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선강·양시원 기자

'5·18 왜곡·폄훼' 강민수·이진숙 지명 철회 여론 확산

〈국세청장·방통위원장 후보자〉

5·18기념재단·공법 3단체 등 성명…민주 광주시당·광주시도 촉구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광주 지역사회의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5·18 공법 3단체는 8일 성명서를 통해 "강민수 후보자는 1995년 자신의 석사 논문인 '우리나라 역대 국무총리의 정치적 위상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전두환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12·12군사반란을 '거사'로 미화했고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명명했다"며 "전두환의 활동에 대해 '국가의 안정을 내세운 결정을 과감성 있게 발휘하고 리더십이 출중한 인물'로 표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념재단과 오월단체는 "이진숙 후보자 역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SNS 글에 동의하는 등 극우적 인식을 보였다"며 "정부는 2명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오월범시도민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 "이진숙 후보자는 '폭도들의 선전선동' 등 5·18 폄훼에 동조했다"며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과 저항을 헐뜯고 살인마 전두환을 스스럼없이 옹호하는 인물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려 하는 윤석열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2명의 후보를 지명한 것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국민이 독재 권력과 맞서 싸운' 자랑스러운 역사로 인정받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광주시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또 다시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진 인사를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더 이상 5·18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공약을 즉시 실천하라"고 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박선강·주성학 기자

경찰 "임성근 前사단장 혐의없다"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 발표…6명 송치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비록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18일 오후 9시30분께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에서 대대장 중 선임인 제11포병 대대장은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임 전 사단장이 이러한 일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에게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언론 등은 임 전 사단장이 여러 수색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대략 아홉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경찰은 모두 임 전 사단장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이 대상이다. /연합뉴스

한우 사료비 인상 차액 125억 한시 지원

전남도, 전국 유일 시행…30마리 이하 사육 1만2천 농가

전남도가 한우 가격 하락과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농가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비비를 활용, 사료 구입비 125억원(도비 25억원, 시·군비 37억5천만원, 자부담 62억5천만원)을 한시 지원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과거 한우 가격 파동기에 소규모 한우 농가의 폐업이 빠르게 진행된 만큼 전남 소 사육 기반 유지를 위해 소규모 30마리 이하 사육농가에 사육 규모별로 차등해 농가당 최대 사료비 인상액 200만원 중 100만원을 한시 지원할 계획이다. 사료비 인상액의 50%를 보조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한우 전체 사육농가 1만6천여 농가 중 1만2천여 농가로 76%가 해당된다.

이는 전남도가 한우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난 6월 화순축협에서 전남도한우협회와 지역 18개 축협 조합장, 시·군 등이 참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소규모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필요성 의견을 수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또한 이날 회의에선 어려운 현장 여건에 선제 대처하기 위해 사료 구매자금 이자 1% 지속 지원,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6만ha)로 사료비 절감, 농·축협 할인 매장을 통한 쇠고기 소비 촉진, 농가의 자발적 저능력우 도태 등 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져(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 대 ▫A/S
T.375-5880

신안동 이면도로코너 대지165㎡ 3층건물 200㎡
급매3억1,000(보5,000월128포함)투자가치최고
==========
우산동 재개발아파트1200세대 정문 코너
대지404㎡ 3층건물 16억5,000(보5,000월600포함)
병의원,슈퍼등 투자가치 최고
==========
담양댐 유원지옆 대로변450,000㎡(계획관리77,000㎡)
경관수려 무풍지대 개인왕국 총가96억(3.3당77,000원)
관광 위락단지, 자녀유산용최적(시세30%)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